

南北關係의 大巡思想的 接近

朴昇植*

目次

I. 序論	3. 對北政策의 特徵
II. 大巡思想의 理解	IV. 北韓의 對南政策
1. 陰陽合德의 意義	1. 對南政策의 變遷
2. 解冤相生의 意義	2. 金正日의 對南政策
III. 南韓의 對北政策	3. 對南政策의 特徵
1. 對北政策의 展開	V. 南北關係와 大巡思想
2. 現政府의 對北政策	VI. 結論

I. 序論

국토 분단으로 인한 민족간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여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최대의 국가 과제이다. 정부 수립 이래 분단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남북은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전제아래,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포용정책을 수용하면서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수 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남북경협 실무회의,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 등 단기간에 많은 접촉과 교류를 하였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남북 화해 협력이 실제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견해와, 비판적인 입장

* 행정학 박사

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와 입장은 南南葛藤을 유발하여, 대북관계의 개선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수립 이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異見이 상존하여 왔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대북과 통일정책에 대한 이견은 정부의 보수적 입장에 대한 진보적·민중적 입장의 비판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진보적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적 입장의 비판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남한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 북한 주도의 남북관계가 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 보수 집단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대북 지원을 하고 경제성이 적은 경제 협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대한 비판, 북한 상선의 영해와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인한 안보 불안 등 다양하다.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얻으려면,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야당과 보수 집단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분단국으로서 이념적 포용성이 낮아 탈냉전을 극복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원하는 포용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하여야 한다. 대북정책이 특정 지도자나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하는 최대공약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¹⁾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정부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과 사회세력의 협력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일반화되어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화해와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여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 관

1)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 국가전략, 제5권 2호, (세종연구소: 1999), p.76.

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남북화해를 통한 평화정착과 통일의 방안은 대순사상을 기본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대순사상은 동양의 전통적 사상을 통합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종교사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적합한 이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과 남북한의 상대에 대한 정책 및 통일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대순사상의 적용 등을 論究해 보고자 한다.

II. 大巡思想의 理解

대순사상은 宗旨인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을 기본으로 한다. 宗旨에 대해서는 각각 하나의 주제로 삼아 大巡思想論叢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²⁾ 대순사상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陰陽合德과 解冤相生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陰陽合德의 意義

음양합덕은 동양의 음양사상을 바탕으로 전개한 사상이다. 음양 개념의 기원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周易 기원설, 性器 기원설, 자연취상설(自然取象說) 등이 있고, 현대에는 시월태양력 기원설(十月太陽曆起源說), 매복 기원설(枚卜 起源說) 등이 있다.³⁾ 음양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다양한 것과 같이 음양사상도 다양하다. 음양의 기본 내용은 음(坤)과 양(乾)이 대립한다는 陰陽二元論이다.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우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과 같이 대립되는 것이 통합적인 체계를 만든다고 한다. 陰인 坤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순종하는 한없이 넓은 대지를 의미하는데, 대지는 모든 것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므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 비유된다. 반면에 陽인 乾은 굳세고 능동적이며 강건한 뜻을 갖고

2) 陰陽合德과 解冤相生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陰陽合德의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第2輯(大巡思想學術院, 1997). ;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第4輯(大巡思想學術院, 1998) 參照.

3) 謝松齡, 天人象 : 陰陽五行學說史導論(山東 : 山東文藝出版社, 1989), 김홍경, 신하령 共譯,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서울 : 연암출판사, 1995), pp. 57-60.

있는 넓고 큰 하늘로 아버지에 비유된다. 坤과 乾이 대립함으로써 변화가 생기는데, 坤과 乾이 하나만 없어도 변화는 생길 수 없다고 한다. 음양사상에서 음과 양의 성질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화한다. 음이 양이 되기도 하고 양이 음이 되기도 하는 전화는 음양의 消長과 交替가 기본이다. 어떠한 事象이라도 음양의 순환과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전시킨다.⁴⁾

음양에 의한 변화와 순환적 질서는 인간사회에도 적용된다. 인간은 번성이 극에 달하면 쇠퇴하여 멸망하는 시기가 오고, 매우 어려운 곤경에 있다 하더라도 번성할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인간은 불운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행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불운의 날을 생각하여 겸손하고 근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음양사상은 인간사회에서도 자연적 질서와 같이 변화하고 순환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체득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⁵⁾ 음양사상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본질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時勢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변화의 법칙을 발견하고 확고한 주관에 의한 신념적 행동을 해야 한다.

대순사상의 陰陽合德은 음양사상을 근본으로 하는데,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특성)을 통합하고 화합시킨다는 의미이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은 각기 고유한 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덕들을 결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주의 만물은 서로 대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이 상호작용하여 변화한다는 음양사상을 발전시켜, 陰德과 陽德을 결합하여 만물이 창생하고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하고, 나아가 우주와 인간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⁶⁾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는 相反과 상호 의존하는 應合의 반복에 의해 조화를 이루는 상극과 상생의 원리와 법칙이 적용된다. 음양합덕은

4) 盧台俊 譯解, 周易(서울 : 弘新文化社, 1988), p.19.

5) 徐相潤 譯解, 周易 (서울 : 韓國協同出版社, 1983), pp. 19-20.

6) 拙稿, “陰陽合德의 思想的 價值”, 前揭論文.

서로 성질과 경향이 다른 음과 양이 경쟁할 뿐만 아니라, 통합되어 조화를 이룬다.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경쟁과 투쟁에 의해 성장하고 쇠퇴하고, 상호 협력하는 상생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음양합덕은 만물의 생성과 쇠퇴는 상극법칙에 의하지만, 결실이 되면 상생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음양합덕을 이루려면 서로 도와주는 상생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순사상은 상극법칙과 상생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조화라 하는데,⁷⁾ 음기와 양기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상생법칙에 의해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려면, 음과 양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과 성향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질과 성향의 가치도 존중하는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과 성향은 다른 존재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2. 解冤相生の 意義

해원상생은 해원과 상생의 복합어이다. 解冤의 字意는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원이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망하거나 원통해 하며, 원한을 갖게 한 상대에게 적대감을 갖고 보복하겠다는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사회의 모든 재난과 불행은 원한을 품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⁸⁾고 하여, 인간의 원한은 개인과 사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따라서 해원은 인류와 우주의 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보고 있다.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한이 발생하는 원인을 구명해야만 한다. 해원은 원한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발생한 원한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선의 해원 방법이라 할 수

7)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89), p. 56.

8) 典經, 공사, 제3장 29절, p. 144

있으며, 이미 생긴 원한도 원인을 파악하여야 가장 적절한 해원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이 생기는 원인과 해원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⁹⁾

첫째,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원한이 쌓여서 큰 병에 걸린다고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충족의 존재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향상된 생활과 이상 추구는 누구나 갖는 욕망으로, 이러한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는 원한이 생기게 된다. 모든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사회는 원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선천세계의 상극원리이며, 인간은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욕구 좌절에 의해 생긴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제 각각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욕구 좌절에서 생긴 원한을 풀도록 하겠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현대사회가 無規範해지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현상이 난무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해원을 하려는 일시적 현상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난법(亂法)이라 하는데, 이는 해원을 위한 일차적 방법이다.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사회를 포함하여 우주 만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극투쟁을 하여 원한이 쌓이게 된 것은 천지도수가 잘못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천지도수는 度數 또는 陰陽度數¹⁰⁾ 라고도 하는데, 天道나 人事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천지도수는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순환하는 법칙이며, 인간사회의 규범 등을 말하는데, 천지도수가 어긋나면 우주의 자연적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 생활에도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천지도수가 어긋나서 상극이 지배하여, 인간 세계는 물론 신명계도 원한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잘못된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아 새로운 세계인 선경을 여는 작업을 천지공사라 한다. 선천세계의 천지도수를 바로잡는 천지공사를 하여야 원한이 풀리고 상생의 道가 실현될

9) 拙稿,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前掲論文 參照.

10) 典經, 공사 제2장 16절, p.120.

수 있다고 한다.¹¹⁾

셋째, 인간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상에 의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과 투쟁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하여 인류는 사상이 달라 반목하고 투쟁한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이질적인 정치, 종교,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내고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에 따라 대립과 분쟁과 통합을 되풀이하여 왔다고 한다.¹³⁾ 각 민족들의 특수한 문화와 사상에 의해서 반목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각 민족들의 문화에서 정수를 선정하여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을 만드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하고,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면 척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척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억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척을 짓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원한 발생을 막는 것이다. 인간은 척이 없어야 잘살 수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척을 짓지 않으면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척을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한이 생기고 나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¹⁴⁾ 척은 자신이 만들은 것이므로 먼저 자신이 척을 풀어야 상대도 척이 풀리게 되므로 해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¹⁵⁾ 척을 짓거나 원한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불행해지므로 적극적으로 척을 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다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공존공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극의 원리에 의해 다른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데에서 생긴다고 한다. 인간사회와 우주 만물은 상극법칙에 의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경쟁 과정에는 갈등과 투쟁의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가 적

11) 典經, 공사 제1장 3절, p.98.

12) 典經, 공사, 제3장 5절, pp.130-131.

13) 典經, 교법 제3장 23절, p. 254

14) 典經, 교법 제2장 44절, p. 242

15) 대순진리회,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 27

용된다. 인간사회에서 상극적인 경쟁은 강자는 승리하여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만, 약자는 패배한데 대해서 억울함과 분함 등의 원한을 갖게 된다. 상극에 의해 생긴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완성할 것을 강조한다.¹⁶⁾

여섯째, 원한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경우에도 생기게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한은 말을 잘못하는 데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고 한다. 남에게 말을 악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원한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미쳐 양자가 모두 큰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그가 잘 되고 자신도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¹⁷⁾

상생이란 음양합덕의 상생원리에 따라,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생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순사상의 상생은 나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상생은 일반적인 상생 개념이 아니라, 이타주의적(利他主義的) 상생이다. 음양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극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인간사회와 우주가 안정될 수 있다. 음양의 대립과 경쟁에 의한 상극관계를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새로운 우주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한을 완전히 푸는 데에서 시작된다. 인간세계를 포함한 우주가 상생관계가 되려면, 상극으로 인한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원은 원한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진 정도이지, 도와주어야겠다는 의식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적극적 협력관계인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16) 典經, 교법 제1장 56절, p. 131

17) 典經, 교법 제1장 11절, p. 223

Ⅲ. 南韓의 對北政策

1. 對北政策의 展開

유엔총회의 권고안에 의한 총선거로 성립한 이승만 정부는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남북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과 북진통일을 추구하였다.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는데,¹⁸⁾ 남한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수립을 하고, 북한지역에도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통일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기본으로 한 북진통일을 추구하여 다른 통일론을 주장하는 집단을 억압하였다.

4·19혁명으로 집권한 제2공화국에서는 보수·혁신을 막론하고 많은 정당들이 등장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되었고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었다. 장면 정부의 초기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부와 같이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유지하였다. 반면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 다양한 통일론을 제기하였다.¹⁹⁾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군사혁명위원회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통일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국력배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군사정부의 통일정책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된 후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었다.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유지하였다.

제3공화국 출범(1963.12.17)이후 1964년 1월 10일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1)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 (2) 실지 회복에 의한 통일, (3)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태세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²⁰⁾ 1965년 한·일 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시위와 다양한 통일 논

18) Research Center for Peaceful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ources Material with Introduction, (Seoul, 1976), pp. 101~102.

19) 제2공화국에서의 다양한 통일 논의는 이정식, 해방삼십년사 : 제3공화국(서울 : 성문각, 1976), pp. 383~423 ;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 종로서적, 1983), pp. 174~175, pp. 190~196 참조.

의가 제기되자, 先建設 後統一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통일을 위해서는 조국 근대화를 실현하여 경제자립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남북한 통일문제는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혁신계 정치인들의 통일논의를 반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하였다.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완전히 포기" 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이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와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한간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제기하여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전환하였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1972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의 핵심적 내용은 (1)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2) 통일은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0월 유신발표를 이유로 북측이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사문화되었다.

제4공화국은 1973년 6월 23일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 (2)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3)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 계속, (4) 북한의 국제기구에 참여 불반대, (5)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6)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7)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1974년 1월 18일에는 무력 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1)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

20)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2(서울 : 대통령비서실, 1973), pp. 31~32.

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하고, (2)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하며, (3)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를 내용으로 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선평화 후통일을 기본으로 한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6월 5일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고,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1)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민주·자유·복지를 목표로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2)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고, (3)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4) 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서 남북한 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 통일헌법 및 이 헌법에 따라 통일민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제6공화국에서는 북한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정하고,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정책을 전개하였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1989년 9월 11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7·7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남북간의 대결을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자 한 정책이다.²¹⁾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를 통일 원칙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은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를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두 개의 다른 체제가 상호 공존 공영하면서

21) 대통령비서실,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1(서울:대통령비서실, 1990), pp. 176~179.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가는 정치적 결합체로서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²²⁾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다.²³⁾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로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과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이 아닌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합을 한다. 통일 과정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 후에 완전한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2. 現政府의 對北政策

가. 對北和解協力政策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등으로 불러 왔는데, 근래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이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민족공영에 대한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⁴⁾ 통일부에서는 대북정책은 3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선의 대안은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포용정책이라고 한다.²⁵⁾

22) 이흥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 국토통일원 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통일방안논문집 제1집,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pp. 20~28.

23)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서울 : 통일원, 1994).

24) 통일부, 2001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1), p. 16.

25)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결과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불개입정책(무관심정책), 포용정책 등 3개 대안이 있는데 포용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라 한다. 봉쇄정책은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 북한체제는 실패한 체제이며 변화없이 현 체제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2) 북한체제의 특성상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없지만, (3)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4)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할 때까지는 대남혁명전략과 군사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²⁶⁾는 것이다. 즉 북한은 실패한 체제이지만 대남혁명전략을 계속 유지하여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3대 원칙은 (1)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화체제를 확립한다. (2) 북한의 붕괴는 부담과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남북간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연합의 실현 등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남북의 합의아래 추진한다. 북한이 단기간 내에 붕괴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엄청난 통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실현한다. (3)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북한 스스로의 변화 노력을 지원하면서 남북 동질성 회복과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하여 7천만 민족의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한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政經分離 원칙을 적용한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정치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협력을 정부관계와 민간관계로 분리하여 교류가 용이한 민간부문을 활성화한다.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은 북한이 위협적인 군사력을 갖고 대남혁명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며, 포용정책은 체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의 개방과 변화의 환경을 조성하여 전쟁방지와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라 하고 있다. 통일부,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http://www.unikorea.go.kr> 參照.

26)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1999. 7. 30), pp. 5~7.

가장 적합한 대안은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경분리에 의한 민간교류는 남북한이 실리를 확보하여 협력하면 민족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치적 관계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남북교류는 相互主義 原則에 의해 추진한다. 남북이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 하지 말고 상호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남북간에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과거의 접근방식(Zero-Sum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남북관계개선이 어렵다. 상호주의는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等價性의 상호주의가 아니라, 대북지원 등 우리측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수준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2001년도에도 “남북화해협력의 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으로 남북화해협력을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1)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2)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정착의 본격화, (3) 相生의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4)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근본적 해결 추진, (5) 대북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²⁷⁾

나. 統一政策

현재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 자주의 통일이다.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다. 민족 자주의 원칙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분단이 이념에 의한 냉전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민족 자주적 통일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주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27) 統一部,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統一速報, 제2001-1호(統一部 統一政策室) 참조.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통합과 동시에 민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당위성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계속 주장해 온 외세 배격과 미군 철수 주장 등과 관련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한다.²⁸⁾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전개라 할 수 있다. 남한이 제시한 남북연합은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한 후에 통일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 남북의 정부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정착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한 후에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1국가 내에 2체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며, 2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는 완성된 통일국가를 이루자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남북연합과 같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²⁹⁾

첫째, 두 방안이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의 전단계, 준비과정을 말한다. 완성된 통일국가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교류 협력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남북 양측이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

28) 통일부, 2001 통일백서, 前掲書, p. 44.

29) 上掲書, p. 46.

한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다. 對北政策에 관한 論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대립되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보수적 입장의 견해는 동일 현상에 대해서도 극한적인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포용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공동선언을 하였으며,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³⁰⁾ 남북정상회담으로 분단 고통의 해소, 민족 공동체 번영의 토대 마련, 민족 동질성 회복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증대, 북한의 탈냉전 적응 노력 등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공존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결에서 화해, 긴장에서 평화, 분단에서 공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긍정적 평가에 비해서 반론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1) 냉전체제하의 이념에 기초한 북한관, (2)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 (3)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 (4)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불안정, (5) 정당간의 이념적 차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분단 이후 북한이 자행한 전쟁과 계속된 극좌모험 등 도발 행태는 북한을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남한에는 현 북한체제를 민족사회의 대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 많다. 북한 정치체제는 아직까지 남한의 안전보장에 가장 위협적인 체제로서 主敵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햇볕정책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³¹⁾ 햇볕정책은 북한정치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화해협력

30) 통일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서울 : 통일부, 2001).

31) 박홍석, “한반도 대외환경의 변화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서울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p. 627.

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는 반통일적일 수 있고 평화공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협력과 지원으로 경제적·군사적으로 강성대국이 되고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되면 북한체제가 더욱 안정되어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북한이 경제 회복, 국제적 고립의 탈피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북한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대남 혁명정책을 강화시킬 수 있다.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경우, 남한과 합의하여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³²⁾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평화공존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북지원이 되어야 하며, 정경분리에 의해 민간부문의 경제협력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가 북한의 주장과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북한의 변화는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시적인 전술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북한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며, 대남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통일론은 남한사회의 혁명을 거쳐 인민민주주의가 수립되면 그때의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을 뜻하는 것으로, '연방제'는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여건 조성을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문제를 민족내부 문제로 전환시켜 미국의 개입을 봉쇄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반공법) 폐지 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라 한다. 북한의 체제존립에 필요한 조건은 남한과의 투철한 혁명적-이념적 적대관계이지, 그 수정이나 이완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며, 연방제의 형태변화는 남한사회의 軟共軟北 효과를 기대하는 기만책일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사라지지 않

32) 上揭論文, p. 629.

고 개혁·개방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공존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추구하는 대북포용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과 유화정책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고, 안보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민간 부문의 대북 투자도 동일민족이라는 인도적 견지에서 비경제적인 사업이라면 실패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은 남한 제품의 북한 반입이 불가능하고, 재일 조총련계의 대북 투자도 성공률이 낮은 실정이다.³³⁾ 또한 현대그룹에서 추진한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은 국민부담이 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개입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한다.

끝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입장에 의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01년 4월 8일 국회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극도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은 체제가 강화되고, 남한은 무장해제되는 위기상황에 빠졌으므로 정권 우선의 대북정책에서 국민 우선의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NMD(국가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미국에 취한 정부의 이중적 외교 태도는 최고의 외교 실책이며 국가적 망신이었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군 당국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실태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화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국회 차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여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 사업대가로 현대는 북한에 지불을 하지 못하여 차질이 있는데,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직간접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한다.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³⁴⁾ 한나라당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33) 동용승, “남북한 경제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북한, 1998년 7월호(북한연구소), p.51.

34) 조선일보, 2001년 7월 3일, p.1.

사전 정지작업으로, 남한의 보수 언론이 장애물이라 판단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 주장한다. 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권 연장 이상의 목적이 있는데,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김정일 답방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절충한 통일방식에 협의한 뒤 여론몰이로 몰아 붙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무리한 논리이며, 세무조사를 하면 답방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세무조사로 언론이 반발하면 답방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한다.³⁵⁾

이 외에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사안마다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 자체와 대북 지원, 김정일의 남한 답방에 대한 빈번한 정부의 촉구, 黃長燁씨의 방미 문제, 금강산 관광 지원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각기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입장은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³⁶⁾ 북한은 대북정책을 수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고, 남북정상회담 및 각종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에 참여하는 듯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태도를 바꾸었다.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우리의 바람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은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이 5차 장관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2001년 4월 23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35) 조선일보, 2001년 7월 3일, p.5.

36)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한 중앙일보의 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58.2%이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41.2%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1년 전의 지지한다는 응답 81.8%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대북정책의 집행에 대한 의견은 57.0%가 '지원만 하고 북한에 끌려 다녔다'고 하고, '교류 협력에 상당한 진전'이 22.6%이고 '과거 수준과 비슷'이 20.1%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중앙일보, 2001년 6월 13일, p.1참조. 그리고 조선일보의 조사에서도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가 50.1%이고, '변했다'가 38.4%로 나타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1년 전의 53.8%에 비해 23.2%로 감소했고,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다가 69.6%나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는 33.9%이고, 부정적 평가가 43.9%이다. 조선일보, 2001년 6월 11일, p.3.

특히 2001년 6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북한선박이 1953년 휴전 이래 처음으로 우리 남방해역 영해를 침범한데 대해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월 2일 침범시에 우리 정부는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측에 항의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여, 제주해협이 제3국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적대국인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진입은 영해 침범이지만, ‘先 평화적 해결모색, 後 군사적 강권발동’이라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6월 4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통해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사실에 대해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고, 무단으로 재침범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였으며,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합의서 채택 등 남북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런데도 북한 선박은 6월 4일, 6월 6일과 7일, 13일 등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데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전에 통보하면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을 인정하겠다고 하거나,³⁷⁾ 발표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과 영해 침범이 재현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넘은 우리 어선에 총격을 하였는데, 이는 불법 어로행위시 나포는 가능하지만, 총격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민족적 화해 차원에서 접근하였는데, 북한은 우리 어선에 국제법을 위반하여 총격을 가한 사건들은 북한 불신의 여론을 조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37) 무해통항권이란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 협약’에서 “연안국의 평화, 공공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영해를 지나서 항행할 수 있는 권리”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해법에서는 제주해협을 영해로 규정하여 제3국 민간 선박에 대해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과는 정전상태인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합의가 없는 한 무해통항권을 일방적으로 주장·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방부, “北韓선박의 領海侵犯과 우리 軍의 대응”, <http://www.mnd.go.kr/> 참조.

3. 對北政策의 特徵

남한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규범적 정향을 보여 왔고, 정부의 다양한 제의와 제안 등은 전략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³⁸⁾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 반면에 남한의 통일정책은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³⁹⁾ 정부 수립 이후 변화되어온 대북 및 통일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을 적대적 존재로 인식하여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과,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이러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현실주의적 입장과 이상주의적 입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⁴⁰⁾ 이념에 근거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으로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보수적 정책은 북한을 정상적인 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로 인식하는 입장이고, 진보적 정책은 북한도 우리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전개한다. 진보적 정책은 역대 정권에서 비정부적 통일정책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역대 정권의 대북과 통일정책은 적대정책, 통일 역량 배양, 포용정책 등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왔다.⁴¹⁾ 분단 이후 냉전체제와 남북한 적대적 대립기인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자유총선거와 멸공을 바탕으로 한 북진통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신축적이면서 현실성과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38) 조민, “남북통일담론의 변화전망, 국민적 합의 형성과제”, 민주평통통일연구회,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의 전개방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0. 12. 20).

39) 유석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정책연구시리즈, 1998-03(외교안보연구원, 1999), <http://www.mofat.go.kr> 참조.

40) 박홍석, “한반도 대외환경의 변화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서울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p.625.

41)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서울 : 법문사, 1994), pp. 491-494.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대북한 경쟁력 成長史라 할 수 있다.⁴²⁾

셋째,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정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1970년대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명분 위주의 정책이었고, 무력에 의한 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권 수호적 정책이었다. 한편 명분과 정권 유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통일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합의를 하는 평화적 방법과 무력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 모두 실현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분단 이후 통일을 추구하였지만, 이질화가 심화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넷째, 정부의 통일정책과 재야·학생운동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은 배제와 경쟁, 상호 보완되어 왔다. 재야와 학생운동의 통일방안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며 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와 민간의 통일정책은 각각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략되기도 하였고, 상대방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⁴³⁾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중적 통일 운동은 정부와 민간이 대립하여 논쟁을 하였으며, 정부의 통일정책과 민간의 통일운동이 폭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다섯째,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보다는 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포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정책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 북한이 포용 정책에 의해 태도가 변화하고 남북한이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실리만 얻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급속하게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으나, 북한은 실리만 얻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42)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 박영사, 1984), pp. 202-205.

43) 임현진,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 패러다임 모색”, 민주평통통일연구회,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전개방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년 12월 20일). <http://www.acdpu.go.kr>

IV. 北韓의 對南政策

1. 對南政策의 變遷

북한은 1945년 8월 소련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나, 남한은 아직 일제를 계승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을 조국통일이라 하는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통일이다.⁴⁴⁾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북한 체제의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에 의해 북한의 내부 사정, 국제적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해 왔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은 초기에는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른 '민주기지론'의 무력적화통일이었다. 한국전쟁까지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기초한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였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하였다. 김일성이 말하는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불세비키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기지를 의미한다.⁴⁵⁾ 민주기지란 원래 스탈린의 통치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킨 후 세계혁명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⁴⁶⁾

북한은 미소 양군의 동시 철거를 주장하고, 1948년 12월 북한주둔 소련군을 먼저 철수시켰고, 주한미군을 1949년 6월에 철수하도록 유도하는 대남평화공세를 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전쟁을 시발로 남북한은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구조를 갖게 되었는데, 휴전 이후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

44) 조선로동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평양 : 조국통일사, 1969), p. 36.

45) 양호민,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 을유문화사, 1988), p. 88.

46)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서울 : 나남, 1992), p. 40.

치회담에서 남북한 총선거의 준비를 위한 '전조선위원회'의 구성, 6개월 이내 일체의 외국군 철수 등을 제시하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외국군 철수 및 감군,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경제 문화교류 및 통행, 서신 교환, 남북 자유선거 실시 등의 위장 평화 공세를 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에도 민주기지론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을 획책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하였다. 남조선혁명의 실천수단으로 남북연방제를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적 조국통일을 이루고, 남한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하였다.⁴⁷⁾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한이 현재 정치제도를 유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었다.⁴⁸⁾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결정에서 3대 혁명역량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북조선혁명역량의 강화, (2) 남조선혁명역량의 강화, (3)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라는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남북연방제를 제안하였고, 외상 허담이 8개항의 대남제의를 하였다.⁴⁹⁾ 허담의 대남제의 내용은 (1) 미군철수, (2) 10만 이하로의 감군, (3)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4) 남북총선거, (5) 각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6)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의 실시, (7) 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8)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이었다.

김일성은 남한의 6·23선언을 한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 강령'

47)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서울 : 북한연구소, 1996), pp. 306~310.

48) 로동신문, 1960년 8월 15일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서울 : 국토통일원, 1985), p. 444.

49) 로동신문, 1970년 11월 13일.

을 제시하였다.⁵⁰⁾ 이것은 허담의 8개항을 요약한 것으로 (1)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2)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3)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4)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5)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노동당 규약 前文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고 명시하고, 과도체제가 아닌 최종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하였다. 군비증강에 따른 북한 경제의 피폐와 남북간의 차이를 의식하여, 단기간내 정치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략이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주요 내용은 (1)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2) 연방제의 구성과 운영원칙, (3) 10대 시정방침 등이다.⁵¹⁾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과소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1)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과소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2)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3)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 석방, (4) 군사과소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제시했다.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2)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3)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의 추구 중지 등을 제시하였다.

연방제의 구성과 임무, 운영원칙 등으로는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한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아래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한다는 것이다. 연방공화국에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50) 로동신문, 1973년 6월 24일.

51)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방의 운영원칙으로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북남이 룬번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⁵²⁾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으로 하고, 대외정책노선은 중립국가로 한다는 것이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⁵³⁾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남한에 대해 (1) 외세의존의 포기, (2) 미군철수 의지 표명, (3)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4)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1992년 2월에 쏘수팸은 지역정부에 外交와 國防權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회담(90.9-92.9)을 통해 ‘南北合意書’를 채택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부여 확대와 교류협력을 인정하는 견고한 聯邦制에서 점차 聯合的인 요소를 포함시켰다.

2. 金正日의 對南政策

김정일은 1964년 6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도원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정치기반 강화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권력승계를 하였다. 김정일은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7년 10월 당 전원회의 선출절차(당규약 24조)를 무시하고 ‘黨中央委·黨中央軍事委 공동명령’의 추대형식으로 당 총비서직을 승계하였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시작되었다.⁵⁴⁾

5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3돌 경축연회 연설”, 로동신문, 1983년 9월 10일.

53)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54) 국가정보원,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 <http://www.nis.go.kr> 참조.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일성 사망에 대한 조문단 방북 환영 담화(1994년 7월 14일), 제5차 범민족대회,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의 정당과 사회단체 인사들의 초청 등을 통해 통일전선전술을 계속하였고, 남한 정부의 김일성 조문단 방북과 범민족대회 참여 불허, 주사과 척결 등의 조치에 대해 비방을 하였다. 1994년 2월 21일 '미북 기본합의문'을 채택한 후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및 비전향장기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을 주장하면서 남북대화를 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5년 1월 24일 정당과 단체연합회를 통해 8월 15일 관문점에서 '통일대축전'과 '대민족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⁵⁵⁾ 그러나 북한은 1995년 5월 30일 북한 수역을 침범한 우성호를 나포하고, 중국 연변에서 안승운 목사를 납치하면서도, 1995년 6월에서 9월까지 쌀희담을 열어 15만톤의 쌀을 지원받는 등 양면성을 보였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 빨리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남한이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연북화해정책으로의 전환, 콘크리트 장벽 제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⁵⁶⁾ 김정일은 1998년 4월 18일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에서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이른바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밝혔다.⁵⁷⁾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은 (1) 민족 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고, (2)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고, (3)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하고, (4)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고, (5)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는 김정일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남한 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남한 정부가 “사대 매국, 외세의존 정책을 재현하고 있다”⁵⁸⁾고 비난하였다.

55) 로동신문, 1995년 1월 5일.

56)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년 1월 1일.

57) 로동신문, 1998년 4월 29일.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경우에도 견지해야할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여 김일성의 대남 및 통일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기존의 ‘통일 3대원칙’을 조국통일의 초석으로, ‘10대강령’을 통일의 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정치강령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선언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였다.⁵⁹⁾ 김정일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서 벗어나 실지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북한은 1999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을 구호로 내 걸고 있는데, 강성대국론은 이념, 정치, 군사강국을 기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실현하자는 것이다.⁶⁰⁾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인민군, 전 인민과 어린 학생들까지도 혁명의 수뇌부를 지켜야 하며, 식량난으로 생활이 곤란해도 ‘고난의 행군’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한다. 2000년 신년사에서 “당창건 55돐(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으로 “당의 영도따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 나가는 총진격의 해”로 설정하였다. 특히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사상중시, 총대(군사)중시, 과학기술 중시를 제시하고, 3대 기둥을 손에 틀어쥐고 총진군을 다그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8) “재현되고 있는 <문민>독재때의 사대매국, 외세의존정책”, 로동신문, 1998년 5월 14일. : “기대할 것도 환상을 가질 것도 없다”, 로동신문, 1998년 5월 15일.

59)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60) 로동신문, 1998. 8. 22.

북한은 2001년에도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설정하였다.⁶¹⁾ 북한은 21세기는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승리에 토대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강성대국건설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하였으며, 21세기는 역사의 풍파속에서 검증된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피어나는 영광스러운 세기라고 하면서, ‘21세기를 김정일의 세기’라 하였다. 2001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정치, 군사, 경제, 대외, 대남·통일 분야 등으로 나누어 주장하였다.

정치분야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 구현을 강조하고, 군사분야는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군부중시 통치 방식을 지속할 것을 표명하였다.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며, 20세기 사회주의 붉은기수호전에서 확증된 혁명의 철리라 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현 경제 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의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하고, ‘우리식 경제관리체계’ 개선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새 세기는 진취적 사업기풍, 실리적·효율적인 경제조직 사업을 요구한다며 국제경제사회에의 동참, 남북관계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시사하였다. 대외분야에서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대남·통일분야에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적 문제가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외세의존 및 외세와의 공조를 탈피하여 동족이 공조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양형섭부위원장은 ‘올해는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라 하면서 “조국통일위업수행에

61) 북한의 당보·군보·청년보의 공동사설은 2001년 1월1일 라디오 및 TV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1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1.1.3). <http://www.acdpu.go.kr> 參照.

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열쇠는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⁶²⁾ 그리고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는데, 호소문은 (1) 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므로 철저히 구현하자, (2)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 (3) 련방제를 조속히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 (4)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과 송환되지 못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려 보내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생사와 안부도 전해 주며 중단된 적십자회담도 빨리 열자, (5) 통일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북과 남 사이에 합의된 협력과 교류의 시간표들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6) 북남공동선언발표 1돛이 되는 6월 15일부터 8.15 광복절까지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장식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는 것 등이다.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각종 대화를 계속하여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듯 하였으나,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북한 상선이 영해와 NLL을 침범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대남 및 통일정책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유훈을 계승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 공동선언을 실행하자고 하면서도, 합의한 각종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에 주력하여 남북관계는 김일성 시대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3. 對南政策의 特徵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보다는 남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 남북한 체제의 우열 정도,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및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였으며,⁶³⁾ 통일정책은 성격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현실적이었다.⁶⁴⁾ 이러한 북한의

62)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화”, 조선중앙통신, 2001년 1월 10일.

63) 박영호, “김정일 체제의 구조적 성격과 정세인식에서 본 북한의 대남정책”, East Asian Review, 1999년 2권.

64) 유석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前揭論文.

대남 및 통일정책을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의 통일정책은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해방,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전략이 실현되기 어려우면 공산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남북대화과 합의를 하는 위장 평화공세를 하였다.⁶⁵⁾ 북한은 군사력이 우월하였을 때에는 무력도발을 하였고, 남한이 사회가 불안정하면 통일전선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반대로 국제정세가 긴장이 완화되고 남한이 국력이 강해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은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은 미국과의 문제로 인식하여 남북관계로 보지 않아 왔다. 북한은 무력통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주한 미군과 한미동맹으로 보고 있어,⁶⁶⁾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남한을 배제해온 '通美封南' 政策의 기초를 유지하여 왔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 한국의 반북대결정책으로 남조선 혁명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미국과 남한에 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⁶⁷⁾ 2001년 3월부터 남북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일련의 남북대화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원인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검증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남한으로부터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무효화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은 문서로 합의하였어도, 자신들의 목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나,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무효화한다.⁶⁸⁾ 북한의 대외 협상은 종결 없는 계속적 거래로 보고

65) 허문영, "북한의 대남전략과 무력도발", 북한관련대책보고서(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1-108.

66) 최주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하여", *East Asian Review*, 1999년 2권.

67)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중앙방송], 1998. 4. 29.

68) 북한의 대외 협상은 (1) 협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선 제압, 결론이 삼입된 의제 제시, 사건 조작 등, (2) 불리한 입장을 역전시키는 수법으로 무효화 전술, 진실 왜곡, (3) 타협방법으로는 강탈적 요구(extortory demand)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양보 유도, 거부권 확보, 지연 전술, 반복 제의, 양보의 효과 역이용 등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한다. 북한이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합의를 하였지만, 무효화하기도 하고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넷째, 북한은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재야 통일집단을 선동하여 김정일 우상화 공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평화협정 체결, 양심수 석방 등 상투적 선동을 하였다. 남한의 경제 및 노동환경을 활용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여 왔다.

다섯째,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군부의 위상 강화를 통한 군사통치체제로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왔으며,⁶⁹⁾ 김정일 유일체제를 확립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대남정책을 계승하여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면서도, 민족 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여 남북 공존을 모색하는 이중전략을 확책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북한 외무상 백남순은 제5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한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고 '햇볕'이요 '포용'이요 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⁷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전형적 장사꾼의 논리', '반민족적 분열과 대결의 논리' 등이라 비난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유지 확대하면서, 남한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받으려 하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식량, 비료, 기술 등의 획득을 위해서는 비판과는 달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하고 수용하고 있다.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대북포용정책의 전면적 부정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포착하여 활용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변화하여 왔다.⁷¹⁾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

있다.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정책연구시리즈, 1996-05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mofat.go.kr/main/top.html> 참조.

69) 정규섭, "북한의 체제위기와 안정성 평가",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서울 : 법문사, 1998), pp. 316-317.

70)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27일.

71)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3단계로 분석하는 입장이 있는데, 제1단계는 연북화해를 요구하며 관망자세를 취한 1998년 3-4월, 제2단계는 북경 회담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5-8월, 제3단계는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1998년 9월부터 현재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종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포용정책", East Asian Review, 2000년 3권(북한문제연구소), <http://www.koreascope.org> 참조.

한 실용주의를 채택하면서, 선전적인 대남 비난은 계속하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는 '호상성'이 통용되지만, 남북관계는 민족 대단결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호주의 원칙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⁷²⁾

V. 南北關係와 大巡思想

남북관계는 분단의 장기화로 이질화가 심화되고 갈등과 대립이 제도적으로 고착되어 안정적인 평화체제로의 개선과 나아가 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논의는 정확한 상황 인식과 현실을 기반으로 한 발전적 통일 이론의 성숙이 필수적이다.⁷³⁾ 남북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통일방향의 모색은 대순사상의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방향에 대한 대순사상의 적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관계는 음양합덕의 상극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과 북은 陰과 陽으로 상극적 대치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남북은 이념과 사상, 정치체제와 경제와 사회구조가 다르고, 군사적으로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양측이 소모적 경쟁으로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남북의 대립과 체제경쟁은 음양합덕의 상극법칙과 같은 형태이다.

둘째, 남북이 적대관계를 탈피하여 화합과 협력,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에 의해 접근해야 하겠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상극법칙에 의해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지만 서로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 음과 양이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창출하는 가치창조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통일은 음양합덕적인 새로운 가치창조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은 근본적으로 분열된 남북이 민족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으로 상호 존중하는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대

72) 로동신문, 1998년 5월 23일.

73) 盧重善 編, 民族과 統一 : 資料編(서울 : 사계절출판사, 1985), p.65.

립을 탈피하려면 상호존중과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음양합덕의 정신이 실천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의 신뢰와 상호 협력은 해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남북한은 냉전체제의 이념적 대결로 인한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으로 인한 원한, 상호 主敵關係에 의해 정복의 대상으로 발생한 원한, 이산가족의 원한, 북한의 무력 도발과 각종 침투에 의한 원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등 합의한 사항 등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데에서 생긴 불신 등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원한이 쌓여왔다. 이와 같이 음양 대치와 같은 남북관계에서는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적대적 증오와 투쟁이 증폭되어 원한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그리하여 남북이 평화적 관계는 일차적으로 상호간에 쌓인 원한을 해소하여야 실현될 수 있다.

넷째, 남북의 화해 협력과 통일은 상생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같은 상호주의와 국제관계의 관례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남북한은 동족이고 현재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통일을 이루어야 할 관계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평화 정착이고, 완전한 하나의 통합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이다. 바람직한 통일의 지향은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배타적 이념이 아니라,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실현하려는 고차원적 이념이어야 한다. 남북이 적대적 대립관계를 탈피하여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고차원적 이념은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다섯째, 대북화해협력정책로 야기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은 적용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적극적 포용과 경제교류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서 대북문제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대중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북한체제의 존속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통일·역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반통일적, 또는 반정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대 정

권에서 민중적 통일 논의나 통일운동 세력을 억압하고, 통일정책은 정부의 독점적 성격을 가져 온 것과 유사하다. 대북 및 통일정책은 정부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통일방안의 모색과 대북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책목적 달성이 어렵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적 관계는 갈등과 투쟁의 비생산적인 상극정치(相剋政治)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남북갈등과 대립은 음양합덕에 의한 조화와 해원상생적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과 투쟁의 비생산적인 상극정치(相剋政治)를 탈피한 해원과 상생적 정치가 실현되어야 대북화해협력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⁷⁴⁾

여섯째,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은 대미관계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필요한 사상이다. 한반도 평화구조에 있어서 미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공조 없이는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미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지향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체제를 형성해야만 한다.⁷⁵⁾ 우리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이 있으며, 주변국들과는 아직도 원한이 남아 있다. 미국은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고, 북한의 검증과 황장엽의 초청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으며, 대일관계도 교과서 개정 등 불편한 상태에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미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면, 상호협력과 이해를 조정하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의 정신이 실행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대순사상에서는 인류 역사를 天尊時代→地尊時代→人尊時代로 발전된다고 한다.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는 선천세계라 하고, 인존시대는 후천세계라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과 분열로 원한이 가득찬 세계이고, 후천세계는

74) 해원상생 정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前掲論文, 參照.

75) 김승재,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 4강과의 관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년도 자문건의총람(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0), pp.51-58.

상생과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져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해원이 되고 빈부차별이 없어지는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에서는 음양합덕을 하는데, 각기 다른 원리와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법칙에 의해서 음양이 대립하여 생존하고 성장하지만, 후천세계에서는 상호 협력하는 상생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음양합덕은 만물의 생성과 쇠퇴는 상극법칙에 의하지만, 완전한 체계를 형성하려면 상생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을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분단 이후 현재까지는 선천세계라 할 수 있고, 남북이 평화가 정착하여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나아가 통일이 되는 것은 후천세계라 할 수 있겠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과 대순사상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에 쌓인 원한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상생적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해원상생적 접근으로 정책목표와 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보하고 포용하는 데에서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고 경제교류를 하면서도, 잠수정 침투, 영해와 북방한계선의 고의적 침범 등으로 도발을 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와 교류를 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호의를 악용할 때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Acknowledgment), 사과(Apology), 재발방지보장(Assurance)의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⁷⁶⁾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남북화해와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 대해 해원상생적 호혜를 베푸는 데에도 침투와 도발행위를 할 때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남한 내의 갈등도 완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북한은 포용하고 상생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북한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데 일방적인 지원과 포용은 통일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남한내의 비판적인 의견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다.

76) 김학준, “남·북한 교류와 정경분리원칙”,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서울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p.430.

VI. 結 論

대순사상 중에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의 의의, 남한과 북한의 상대에 대한 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와 통일을 지향하는데 대순사상의 적용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음양합덕은 음(坤)과 양(乾)이 대립한다는 陰陽二元論을 기반으로 하는데,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통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이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相反과 應畝의 반복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상극법칙과,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상생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원상생은 원한을 완전히 풀어주고 나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타주의적 의미로 음양합덕의 실현을 위한 원리이다.

남한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반공 이념과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용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을 적대적 입장에서 자유총선거와 반공을 강조하여 왔고, 1970년대 이후에는 북한을 실제로 인정하고 동일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지향하여 왔다.

북한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무력해방,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을 기본으로, 이러한 통일전략이 실현되기 어려우면 공산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남북대화와 합의를 하기도 하고 위장 평화공세를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은 미국과의 문제로 인식하여 남한을 배제한 通美封南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무효화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위장 평화공세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의 상대에 대한 정책과 통일정책은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어서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여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도적 각종 지원과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6·15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포용정책에 의해 태도가 변화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실리만 얻고 남북교류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대립되어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과 통일은 국가적 과제로서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데, 이는 대순사상에 기초한 접근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으로 음양합덕의 상극법칙이 적용되어 왔는데, 상호 존중과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음양합덕의 정신이 실천되어야 한다. 남북의 신뢰와 상호 협력은 해원과 상생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남북한은 냉전체제의 이념적 대결로 엄청난 원한이 쌓여 왔는데, 상호간의 원한을 풀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나아가 남북의 화해 협력과 통일은 상생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과 북이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평화 정착이고, 완전한 하나의 통합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이다. 바람직한 통일의 지향은 남북간에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배타적 이념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음양합덕적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은 적용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온 북한에 대한 포용과 인도적 각종 지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상극관계가 해원과 상생적 정치로 전환되어야 국민적 합의를 산출할 수 있고, 대북화해협력과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김정일의 권력승계과정, <http://www.nis.go.kr/>
- 국방부, “北韓선박의 領海侵犯과 우리 軍의 대응”, <http://www.mnd.go.kr/>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서울 : 국토통일원, 1985).
- 김승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 4강과의 관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0년도 자문건의총람(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0),
- 김정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중앙방송], 1998. 4. 29.
-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정책연구시리즈, 1996-05(외교안보연구원), <http://www.mofat.go.kr/main/top.html>
- 김학준, “남·북한 교류와 정경분리원칙”,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서울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 盧重善 編, 民族과 統一 : 資料編(서울 : 사계절출판사, 1985).
- 盧台俊 譯解, 周易(서울 : 弘新文化社, 1988).
- 大巡眞理會敎務部, 大巡指針. 서울 : 大巡眞理會 出版部, 1984.
- , 典經. 서울 : 大巡眞理會 出版部, 1989.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2(서울 : 대통령비서실, 1973).
- ,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1(서울 : 대통령비서실, 1990).
- 동용승, “남북한 경제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북한, 1998년 7월호(북한연구소)
-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77)
- ,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第4輯(大巡思想學術院, 1977)
- 박영호, “김정일 체제의 구조적 성격과 정세인식에서 본 북한의 대남정책”, East Asian Review, 1999년 2권.
- 박흥석, “한반도 대외환경의 변화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문제연

- 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권역별 세미나(서울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99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1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01.1.3), <http://www.acdpu.go.kr>.
- 謝松齡, 天人象 : 陰陽五行學說史導論(山東 : 山東文藝出版社, 1989), 김홍경, 신하령 共譯,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서울 : 연암출판사, 1995).
- 徐相潤 譯解, 周易 (서울 : 韓國協同出版社, 1983).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서울 : 북한연구소, 1996).
- 양호민,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 을유문화사, 1988).
-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서울 : 나남, 1992).
-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서울 : 법문사, 1994).
- ,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정책연구시리즈, 1998-03(외교안보연구원, 1999), <http://www.mofat.go.kr>.
- ,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www.mofat.go.kr.
- 이정식, 해방삼십년사 : 제3공화국(서울 : 성문각, 1976).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 국가전략, 제5권2호, (세종연구소, 1999).
-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포용정책”, East Asian Review, 2000년 3권(북한문제연구소), <http://www.koreascope.org>.
- 이흥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 국토통일원 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통일방안논문집 제1집(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 박영사, 1984).
- 임현진, “남북화해시대 통일운동의 새 패러다임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 전개방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00년 12월 20일), <http://www.acdpu.go.kr>
-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89).
- 정규섭, “북한의 체제위기와 안정성 평가”,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 질서

- 와 한반도(서울 : 법문사, 1998).
- 정용석, "진정한 남북화해 이루려면", 동아일보, 2001년 6월 9일.
- 조 민, "남북통일담론의 변화전망, 국민적 합의 형성과제", 민주평통통일 연구회, 남북화해협력시대 통일운동의 전개방향(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사무처, 2000. 12. 20).
- 조선로동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평양 : 조국통 일사, 1969).
- 최주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하여", East Asian Review, 1999년 2권.
-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서울 : 통일원, 1994).
- 통일부, 2001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2001).
- ,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http://www.unikorea.go.kr>.
- ,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1999. 7. 30).
- , 2001 통일백서(서울 :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1).
- , "대북정책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統一速報, 제2001-1호(統一部 統一政策室, 2001).
- ,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서울 : 통일부, 2001).
-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 종로서적, 1983).
- 허문영, "북한의 대남전략과 무력도발", 북한관련대책보고서(서울 : 민족통 일연구원, 1994).
- Research Center for Peaceful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ources Material with Introduction(Seoul, 1976).
- 로동신문.
- 조선일보.
- 조선중앙통신.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